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 EU, 영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 고찰

전윤선·나종연

요 약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세계 최대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유튜브에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처벌의 근거는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구별하여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있다. 중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목적으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을 올해 제정하였다.

이러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의 배경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아동이 지닌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아동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에 대한 부모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쉬워졌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정보가 기업 활동의 가치창출원천으로 여기게 되면서, 유튜브 사례처럼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 요구와 침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동은 단기적으로는 발달 과정 중에 있어 충분한 인지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기에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반영하여 아동을 위한 특별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제도들에 아동을 위한 조항을 추가한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KISA-WP-2019-0023)”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전윤선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주저자(ysys37@gmail.com)

나종연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신저자(jrha@snu.ac.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법제도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영국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국가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추후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에게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법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상황에 처하거나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국가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 구성원들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을 개인정보 침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동 시기의 개인정보 관련 의사결정이 온라인 환경에 남아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성을 지닌 디지털 사회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프라이버시, 아동소비자보호, 온라인개인정보,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영국 연령적합설계규약, 정보통신망법

목 차

I. 서론	V.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국의 법제도 현황
II. 이론적 배경	VI.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국의 법제도 현황
III.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	VII. 결론 및 제언
IV.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EU의 법제도 현황	

I. 서론

현재의 아동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릴 만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란 세대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디지털 환경에 거부감이 없다. 최근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유아시기로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9%로 나타났다, 그 시작 연령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석·문혁준, 2015).

이처럼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화된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어 아동들의 디지털 활동 참여 역시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상업적 접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역시 증가하고 있다(최혜선, 2013; Shin et al., 2012). 이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기업의 가치창출 원천으로 여겨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은 회원가입, 설문조사, 게임, 채팅, 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제3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호, 2001).

이러한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상업적인 타겟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이인호, 2001; 윤주희, 2014).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함에 따른 결과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수의 아동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한 경험이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계정을 공개상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Afee, 2009; Shin et al. 재인용, 2012).

이에 주요 나라들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98년부터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을 운영해왔으며, 영국에서는 2019년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으로서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을 공표하여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도 2019년 아동의 개인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의 구조에 아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성인과 다른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보다 강화된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UNCRC)에 따라 아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UN, 1990). UN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사회 각 영역에서 우선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UN, 1990). 따라서 국내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영역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수준으로 고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윤정희, 2014). 이는 성인과 다른 아동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했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로써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소비자(정보주체), 기업,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아동 소비자에 적용하여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Culnan & Bies, 2003; 김지혜 외, 2018). 단, 성인과 다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UNCRC의 기본원칙을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보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에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을 더하여 주요 국가별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의의를 지닌다. 2018년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후 국제법과 비교된 적이 부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국제법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제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또, 아동이 디지털 활동의 주체로서 보다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개인정보 주체성을 지닌 디지털 사회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행동 주체로서의 아동 소비자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어 소비자들의 디지털 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해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의 82.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디지털 활동 참여 시작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이란·현은 자(2014)에 따르면 유·아동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흥미와 몰입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기기들을 능숙하게 소화해내고, 매일 이전보다 향상된 능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은 능동적으로 디지털 활동에 참여하는 디지털 행동 주체이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에 따라, 자신의 디지털 활동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가 어떠한지 판단하기에는 인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이다(UN, 1990). 특히,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동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Murray, 2009; Shin et al. 재인용, 2012).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나 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노출될 경우 아동을 쉽게 현혹하여 상업적 대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Shin et al., 2012).

Postman(1983; 이란·현은자 재인용, 2014)은 미디어가 아동을 성인처럼 행동하게 하고, 성인의 특권을 누리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적용해 보면 개인화된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아동의 디지털 활동을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따른 위험 역시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달리 완전한 인지역량을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성인과 달리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UNCRC에 따르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며,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N, 1990). 뿐만 아니라 장차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인종이나 출생 등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UNCRC 제3조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인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UN, 1990). 따라서 아동이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디지털 활동에 있어서도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 이익이 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 프라이버시(Consumer Privacy)는 소비자가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고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유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경우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김지혜 외, 2018; 김효정, 2016; 남지연·나종연, 2010; Culnan & Bies, 2003). 소비자 프라이버시는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활용의 대상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비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김지혜 외, 2018). 이는 디지털 행동 주체로서 활발히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아동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Culnan & Bies(2003)와 김지혜 외(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통제력, 기업의 자율규제, 그리고 정부의 법제도 제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김지혜 외(2018)에 따르면 첫 번째 축인 소비자의 통제력은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기초한 개념을 의미한다. 두 번째 축인 기업의 자율규제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위험인식과 만족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업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로 보았다. 마지막 축인 정부의 법제도 제정은 기업의 자율규제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가능성을 포괄하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용

하여 살펴보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디지털 행동 주체로서 아동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앞서 아직 완전한 성장 이전이라는 아동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UNCRC에서 제시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이 개인정보 맥락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UN, 1990). 또, 아동은 주어진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여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처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정찬모, 2014; ICO,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나라들의 법제도에 반영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보완하여 분석의 틀로써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이용주체인 아동 소비자와 보호주체인 보호자가 분리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 프레임워크의 소비자 관련 축을 보호자와 디지털 활동 주체로서의 아동 소비자로 분리하였다. 이 중, 아동이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UNCRC에서 제시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의 최선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디지털 활동 주체로서의 아동 소비자에 적용하여 정부와 기업, 보호자와 같은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아동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분석의 중심축으로 두었다(UN, 1990). 보호자에 대하여서는 아동 소비자의 보호주체로서 아동 소비자를 대신하여 얼마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최선 이익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견인하는 제도적 토대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아동의 최선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정보 맥락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된 정부기관의 실행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적 적용범위와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 그리고 사회구성원이 법제도를 따르도록 마련된 실행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관련 선행연구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 사이에 어떠한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미국의 법제, 그리고 국내 법제를 비교하고 있다. 정찬모(2014)의 경우 2013년 개정된 COPPA 시행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에 필요한 제언을 제공하였고, 이인호(2001) 역시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내법의 원칙들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미국의 입법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최혜선(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EU, 그리고 국내의 아동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을 비교하여 국내법의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들의 실행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

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된 분석내용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과 그에 대해 정부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이며 규범력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외에도 아동이 성인과 다르게 지닌 특수성과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현행 국내법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윤주희(2014)는 그동안의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보다는 법정대리인 동의권이라는 제도적 접근에만 치중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가 일회성의 동의로 끝나는데, 개인정보는 일단 제공되고 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시한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잘못된 이용이나 관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윤주희, 2014). 이에 윤주희(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현행 제도 역시 아동의 연령별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상이하므로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제도적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의 특성과 그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을 이해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는 온라인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온라인 아동 보호 정책을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제언을 도출하였다(OECD, 2011). 해당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였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직·간접적으로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다층적 정책 구조인지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종류로는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 및 그에 대한 접근 위험,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위험,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써 OECD(2011)는 각국에서 정책적 협력 및 일관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 협조를 통한 정책적 효율성 증진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Brown & Pecora(2014)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수월해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UNCRC를 준거의 틀로써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UNCRC 제17조에서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1999년 오슬로 챌린지(Oslo Challenge)에서 아동이 미디어에 참여할 권리를 UNCRC에 추가함에 따라 UNCRC가 진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시작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Brown & Pecora, 2014). 이를 토대로 Brown & Pecora(2014)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정책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소통의 권리 모두를 인정하고, 현재 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함을 제시하였다. 또, 정책이 처벌기준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장려하여 정책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아동이 어려운 설명 등으로 인해 서비스 규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Ⅲ.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¹⁾

미국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OPPA를 특별법으로서 1998년에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해당 법의 집행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이며, COPPA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이하 COPPA 시행령)’ 역시 시행하고 있다. COPPA 시행령은 아동의 모바일 기기 및 SNS 이용 증가와 같은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 확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3자에 대한 운영자 책임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제도적 적용범위

COPPA 제6501조에 따르면 아동(Child)은 13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하며, 규제 대상인 운영자(Operator)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 외에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실질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COPPA 시행령 제312.2조에서는 운영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FTC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나 웹사이트의 주제의 관련성, 시·청각적 내용, 움직이는 캐릭터나 아동 지향적 활동 등의 사용, 모델의 연령, 언어, 아동에게 매력적인 유명인의 등장, 그리고 아동에게 직접 노출되는 광고의 유무 등이다. 이처럼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자라할지라도 위와 같은 FTC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자로 간주되어 COPPA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나 웹사이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가능한 온라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COPPA 시행령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해 이름이나 물리적 주소, 온라인 연락처,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프로세서의 고유한 시리얼 넘버 외에도 가명(screen name)과 이용자이름(user name), 쿠키(cookie)나 IP주소와 같은 온라인 행태정보인

¹⁾ FTC(1998)의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및 FTC(2013)의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참고하여 작성

지속적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 위치정보, 아동의 사진 및 음성파일 등을 개인정보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9년 FTC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대하여 13세 미만 아동의 쿠키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타겟 광고를 한 혐의를 부과하여 COPPA 제정 후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청구한 것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FTC, 2019.09.04). 이를 통해 현재 이용자 온라인 행태 정보에 대한 상업적 접근 및 활용이 아동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법적 근거에 따라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미국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을 보호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운영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COPPA 시행령 제312.3조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실질적 근거가 있는 운영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내용, 사용방법, 공개절차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된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수집된 정보의 사용 또는 보유를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온라인 활동 참여 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의 기밀유지, 안전성,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고지방법에 대하여서는 COPPA시행령 제312.4조에서 운영자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고지하는 것과 아동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 영역 내에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고지하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지 내용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고지를 하고 난 뒤, 운영자는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나 전화, 영상통화, 신분증확인,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혹은 FTC로부터 안전항제도(Safe Harbor Program)를 통해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운영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고지 및 동의는 이전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시 고지되고,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3.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통제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 미국에서는 법정대리인이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COPPA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운영자가 아동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열람권을 지닌다.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운영자에게 열람 요구를 할 경우, 운영자는 열람 요청을 한 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정보와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보호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운영자의 추가적인 이용 및 수집에 대해서도 거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4. 기업의 자발적 노력

미국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권장하며 안전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FTC에 제출하여 승인요청을 하면, FTC가 관보게시를 통한 공공의견수렴을 거쳐 18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승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은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다 자유로운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게 된다.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FTC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COPPA 시행령 제312.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COPPA 시행령 내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수준의 자율규제여야 한다. 둘째, 사업자단체 구성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평가는 최소 연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에 대한 의무적 공표, 소비자구제, 자발적 벌금 지불,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FTC 회부 등을 포함한다.

승인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이 기존 가이드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FTC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미흡함이 있을 경우 FTC는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정부의 실행체계

운영자가 COPPA 및 COPPA 시행령을 위반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불공정이나 기만행위 또는 관행에 영향을 주는 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 (a)(1)(B)항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해 민사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2019년에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cTok)과 유튜브(Youtube)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 FTC는 COPPA 위반 행위로 적발하여 각각 570만 달러, 1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FTC, 2019.02.27., 2019.09.04.). 벌금 외에도 FTC는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컬리(Musical.ly)사에게 COPPA를 준수하도록 하여, 이후 틱톡에서는 연령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하고, 아동들의 경우 개인정보의 공유는 금지하며 콘텐츠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서도 제한을 두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Musical.ly, 2019.02.27). 유튜브 역시 아동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수정된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동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서는 맞춤형 광고와 댓글을 금지하고, 아동 대상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로 하였다(Youtube, 2019.09.04).

IV.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EU의 법제도 현황²⁾

EU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통해 자연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EU 내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에 필요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GDPR 시행 이전까지 적용된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와 비교해보면, ‘Directive 95/46/EC’ 지침은 회원국에게 개인정보보호 권고에 그쳐 구속력에 한계가 있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반면 GDPR은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서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고, GDPR의 적용에 있어서도 EU 외 영역에서라도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등 이전보다 유럽 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도적 적용범위

GDPR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다루는 일반법임에도 아동을 성인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아동에 대한 특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아동의 범위로서 제8조 개인정보처리 시 아동 동의에 관한 규정에서 16세 미만의 대상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 전문 제38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결과,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본인의 권리를 아동은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GDPR을 준수해야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

²⁾ European Union(2016)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참고하여 작성

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또,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GDPR에서는 EU 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EU 내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에 대한 대리인과 같은 경우도 유럽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GDPR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의 일체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과 관련된 생태정보와 건강 관련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행해지는 일련의 작업으로 수집, 기록, 편집, 구성, 저장, 가공, 변형, 검색, 참조, 사용, 이전을 통한 제공, 배포나 기타방식으로서의 제공, 연동이나 연계, 제한, 삭제, 파기 등을 포함한다. 또, 개인의 업무성과, 경제적 상황,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인 프로파일링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로 본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GDPR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구조이므로 미국 COPPA처럼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기업이 더 중시하고 우선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먼저 제8조에서는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아동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이 실제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 EU 회원국마다 아동의 연령을 법률로서 16세보다 낮춰 규정할 수 있으나 그 연령이 13세 미만인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는 16세를 기점으로 아동의 인지역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추가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f호에서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목적에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 아동의 기본 권리와 이익, 자유가 기업의 이익목적보다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전문 제58조에서는 아동은 구체적인 보호수단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처리에 대한 모든 통지 및 의사표시가 해당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고지할 때에는 고지의 내

용이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정보주체가 아동일 경우 더욱 그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제12조 제7항에서는 고지 형식에 대해 표준화된 아이콘을 사용하여 가시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가독성이 뛰어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지 시 언어적 방법 외에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아동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통제권

GDPR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일반 성인과 분리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주체에게 부여되는 포괄적인 통제권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권과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권,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삭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불법적이거나 개인정보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파일링과 같이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도 포함한다.

그러나 GDPR은 아동이 아직 발달 중에 있으며, 추후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아동에게 더 강조되어야 할 권리를 표현하고 있다. 전문 제65조에 따르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 시기에 내린 개인정보 의사결정으로부터 어려움이나 불편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삭제권과 처리제한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문 제71조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아동이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겟 광고 등과 같은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쉽게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시사된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EU는 현재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 경험이 추후 더욱 발전할 디지털 사회에서의 건강한 구성원을 길러내는 토대가 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업의 자발적 노력

EU에서는 GDPR 제5절 행동강령과 인증에 대한 권고 규정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40조 행동강령의 경우, 미국의 안전항제도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들을 대표하는 협회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아동에게 제공

되는 정보 및 아동의 보호, 아동에 대한 친권을 보유한 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된 행동강령은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협회 또는 기관은 승인된 행동강령에 대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행동강령 외에도 GDPR 제42조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인장 및 마크의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되며, 인증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발급받더라도 기업의 GDPR 규정 이행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인증 체계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온라인 서비스가 검증된 개인정보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돋보이므로, 아동을 보호하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기업이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 하도록 GDPR 제57조의 감독기관 업무에서 밝히고 있다.

5. 정부의 실행체계

GDPR 제82조에 따르면 GDPR 규정 침해에 따른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를 초래한 사건에 대하여 책임 입증의 의무는 개인정보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에게 있다는 것 역시 밝히고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아동을 비롯한 개인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제83조에서는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8조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관련 위반은 1천만유로 또는 사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2%에 이르는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나 기본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유로 또는 사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4%에 이르는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이처럼 유럽 지역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기업의 전 세계 총매출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주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V.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국의 법제도 현황³⁾

영국의 경우 EU의 GDPR을 보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2018(Data Protection Act 2018; 이하 DPA 2018)이 있으나, 2019년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연령적합 설계규약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약은 2020년 1월 최종 수정을 통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 연령적합설계규약은 온라인서비스들이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발달 단계적 니즈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의 담당기관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감독 및 규제 등의 역할을 맡은 영국의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 이하 ICO)이며, 총 15가지 표준(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은 UNCRC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며, 기업들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GDPR과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이하 PECR)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DPA 2018보다 최근 발표된 연령적합설계규약의 15가지 표준의 세부 내용을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영국의 제도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15가지 표준은 <표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표 1> 연령적합설계규약 15가지 표준의 재분류

재분류기준		연령적합설계규약의 15가지 표준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 원칙		1.4)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아동의 접근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설계 및 개발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3. 연령 적합 적용: 본 규약의 표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인 식별 연령에 대하여 위험 기반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
		5. 개인정보의 유해한 사용: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동복지에 해가 되거나 산업 관행, 기타 규제 조항 또는 정부의 조언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 접점 측면 (Front-end)	개인정보 보호 일반 원칙	4. 투명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및 용어,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은 아동의 연령에 맞게 간결하고 눈에 잘 띄며 분명한 언어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가 활성화 될 때 한입크기의 추가적 설명을 제공해야 함
		6.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 사업자 자신이 게시한 용어, 정책, 커뮤니티 표준을 유지해야 함
		7. 기본 설정: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설정으로 해야 함
		8. 데이터 최소화: 아동의 적극적이고 의도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유지하며, 아동들이 활성화시키고 싶은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ICO(2020)의 Age appropriate design: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 - Final version: to be laid in Parliament 및 ICO(2018)의 Data Protection Act 2018을 참고하여 작성

재분류기준		연령적합설계규약의 15가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아동 특화 원칙		9. 데이터 공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함
		10. 위치정보: 위치정보옵션 해제를 기본 설정으로 하며, 위치정보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아동에게 분명한 표시를 제공하고 아동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옵션은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꺼져야 함
		11. 자녀보호기능: 자녀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서비스 활동을 모니터링 할 때 해당 아동에게 분명한 표시를 제공해야 함
		12.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 기능 끄기로 기본 설정을 해야 하며,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보유한 경우에만 프로파일링 기능이 허용 됨
		13. 넛지 기술: 아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악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넛지 기술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14. 연결되는 완구 및 기기: 인터넷에 연결되는 완구 및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본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 관리 측면(Back-end)		15. 온라인 톨: 아동이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하고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접근가능한 도구를 제공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DPIA):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아동의 연령, 역량,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1. 제도적 적용범위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세부적인 표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아동으로 볼 수 있는 연령범위를 0세에서 17세까지로 규정하고 5가지 발달 단계에 따라 나누고 있다. 구체적인 아동의 발달 단계별 구분 내용은 0-5세의 ‘유아기(Pre-literate & early literacy)’, 6-9세의 ‘초등기(Core primary school years)’, 10-12세의 ‘전환기(Transition years)’, 13-15세의 ‘10대 초반(Early teens)’, 16-17세의 ‘예비성인기(Approaching adulthood)’이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각 단계별로 아동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이는 역량과 기술,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동을 성인과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아동의 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이하 ISS)를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영국 아동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앱이나 프로그램, 웹사이트, 게임, 커뮤니티 환경 등 온라인서비스와 연결된 화면이 있거나 없는 기기

4) 각 표준 앞에 부여된 숫자는 ICO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 제시되는 표준 순서를 의미함.

또는 완구를 다루는 기업도 ISS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기업이 아동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규약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포괄적으로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도록 연령적합설계규약을 통해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연령적합설계규약 내에 별도의 정의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영국의 DPA 2018에 따르면 EU의 GDPR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밝혀 개인 식별 정보와 온라인 행태정보 모두를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 다루는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동의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아동에 특화된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표준은 여섯 가지로 첫 번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관련 용어,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 등은 간결하고, 눈에 잘 띄며,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언어 및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이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자가 게시한 용어, 정책, 커뮤니티 표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Policies and community standards)’이며, 세 번째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기본 설정을 두도록 하는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이다. 네 번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아동들에게 어떤 서비스 요소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sation)’이며 다섯 번째는 아동을 범죄 또는 성적 착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 또는 조직 내 다른 부문 간에라도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이다. 여섯 번째는 위치정보가 기본 설정으로 반드시 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위치정보 옵션을 해제해야 하며, 위치정보가 활성화 될 시에는 분명한 사인을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의 위치가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을 할 것을 명시하는 ‘위치정보(Geolocation)’ 관련 표준이다. 이러한 ICO의 표준들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일반법에서 명시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것과 달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가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표준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자녀보호기능(Parental controls)’으로 보호자가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ICO는 부모가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그 사실에 대해 아동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인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표준으로 아동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쉽게 상업적인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기능을 꺼두도록 하며, 해당 기능이 활성화 될 경우 목적별 동의 획득과 보호자의 개입이 필

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끄도록 유도하는 ‘넛지 기술(Nudge techniques)’을 금지하는 표준이다. 네 번째는 ‘온라인에 연결되는 완구 및 기기(Connected toys and devices)’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기기는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당하므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기업이 잘못 관리할 경우 아동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ICO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밝혀야 하며, 아동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이용자 프로필 옵션 등의 기능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기의 작동과 연결방식에 대하여 아동과 보호자에게 ‘적시에(just in time)’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기기가 단순히 서있거나 경청 모드로 사용될 경우에 대하여서도 개인정보 수집 여부에 대하여 아동 또는 보호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아동특화 표준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를 쉽고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아이콘이나 접근이 쉬운 매커니즘을 이용한 ‘온라인 도구(Online tools)’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표준들은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전, 기업이 개인정보와의 접점에서 아동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나라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을 통해 아동과 일반 성인 소비자 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ICO는 연령, 인지역량,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들의 니즈를 고려하도록 하여 아동에 특화된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UNCRC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는 다른 국가의 법제도들에서 명시하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는 달리, 아동의 포괄적인 권리에 대하여 기업이 보호하고 실현시키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포괄적 권리에 대해서는 UNCRC에 따라 표현의 자유, 생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미디어로부터 정보에 접근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에 참여할 권리, 경제적, 성적, 다른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들이 디지털 활동주체이자 소비자로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 아래 세 가지 표준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ISS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ICO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UNCRC 제3조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된 바에 기초하고 있다. 또,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기업은 이에 대하여서도 인지하여 지원해야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단계가 다르고, 그에 따른 니즈 역시 달라지므로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아동의 연령별로 보호 수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령 적합 적용(Age appropriate application)’에 대한 표준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 전체 집단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별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기업이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과 복지에 해가 되거나, 아동 복지에 대한 관련 산업 법령, 또는 다른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개인정보의 유해한 사용(Detrimental use of data)’에 대한 표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관련 산업 영역의 실행 규약과 표준들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예방적인 입장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기업의 자발적 노력

기업이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이하 DPIA)’에 대한 표준이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PIA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ICO는 기업이 DPIA를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이 아동의 연령별로 다른 역량과 발달 단계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DPIA는 GDPR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DPIA를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정책당국에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ICO는 연령적합설계규약의 15가지 표준에 속하진 않지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본 규약과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 프로그램의 구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무자 교육, 관련 기록물의 유지 등을 해당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정부의 실행체계

ICO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공익이 규제 조치의 유형을 고려할 때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거나 실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규제 조치보다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ICO의 태도를 토대로, 연령적합설계규약을 준수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서 ICO는 통지, 경고, 견책, 개선명령 및 벌금통지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연령적합설계규약이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GDPR 및 PECR과 밀접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이 해당 법제도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GDPR 및 DPA 2018에서의 벌금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 정부기관이 아동 개인정보 침해를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와 달리 아동에 특화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I.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국의 법제도 현황⁵⁾

국내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구조를 통해 국내의 법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구조는 아니며,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일반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반법의 구조에서 2018년 12월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였다.

세 가지 법제도 중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국내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적 적용범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제4조 제2항 제6의2호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아직 완전한 발달을 이루지 못하여 인지역량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쿠키나 IP주소와 같은 온라인 행태정보를 지속적 식별자로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미국의 COPPA나 EU의 GDPR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내에서도 온라인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판단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지닐 수 있는 접근권한의 범위는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와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해 부여된 고유정보, 그리고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기능이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일반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아동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한 국내의 보호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 원칙과 아동 관련 추가 조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일반 원칙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곤란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처리위탁을 희망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반 원칙에 추가로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22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이다. 또,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성인과

다른 인지역량을 가진 아동의 특수성을 기업이 인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아동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 양식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2018년 12월에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부재하였다. 그에 따라 국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긴밀히 관련되는 세 가지 법제도 간에 아동에 대한 고려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역시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만14세 미만 아동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아동들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용자 관점에서 아동이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노출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독일에서는 마이크 내장형 인형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스마트토이에 대하여 아이와 부모의 대화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밀하게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기’로 분류하고, 판매를 금지한 사례가 있다(ZDNet Korea, 2017.02.20). 국내에서도 항상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AI스피커와 같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대중화 되고 있으므로 아동들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하는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통제권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정대리인이 이용자 본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동의철회권,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 현황에 대한 열람권, 그리고 오류에 대한 정정권을 지닌다. 2018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권리 행사가 더 쉽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명시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는 일반적인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아동이 추후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아동은 추가적인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UNCRC의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4. 기업의 자발적 노력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촉구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안전항제도처럼 기업들이 자율규제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연간 자율규제 수행계획을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다. 자율규제단체의 실제 수행업적이 우수하면 자율규제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맥락에서의 아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성되어야 하는 항목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 중에는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포함하도록 할 뿐 아동인지 여부를 기업이 식별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업이 아동확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한 자가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한 번의 동의만 획득하면 지속적으로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인호, 2001; 윤주희, 2014).

5. 정부의 실행체계

국내에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미준수하는 기업은 대부분 벌금형을 통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기업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국, EU, 영국과 한국의 관련 법제도들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범위,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제도, 개인정보 통제권, 기업의 자율규제, 그리고 정부의 실행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도출한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1. 아동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사업자 및 개인정보의 범위 보완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 EU, 영국, 그리고 한국 법제도들의 적용범위를 비교해보면, 국내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접근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COPPA 시행령의 경우, 아동의 접근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EU 역내에 있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밝힘으로써 국경의 경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국내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쿠키나 IP주소와 같은 온라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로써 정의됨을 명시하여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타겟 광고와 같은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하여 아동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타겟 광고에 노출되도록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연합뉴스, 2019.09.05.).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 식별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온라인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석여부에 대한 논의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온라인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아 기업을 규제한 적은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환경에서 개인 또는 디바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대한 행태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고 이로써 소비자 기만이나 피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라인 행태

정보에 대하여서도 일반 개인 식별 정보처럼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김지혜 외, 2018). 특히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상업적 접근을 분별하기 위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아동의 정보들이 결합 시 어떠한 식별력을 지니는지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국가별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적용범위 비교 및 도출 제언

	미국	EU	영국	한국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대상 기업 및 일반 대중 대상이더라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적용대상에 포함(시·청각적 내용, 움직임의 캐릭터, 아동 지향적 활동의 사용, 모델 연령, 아동에게 매력적인 유명인 등장, 아동에게 직접 노출되는 광고 유무 등) · 개인 식별 정보 외, 쿠키 및 IP주소 등 온라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결과,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본인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16세 미만의 대상 · EU 역내·외에 관계없이 EU 거주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에 개인 식별 정보 외 쿠키, IP주소와 같은 온라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연령별 5가지 발달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차별적 역량에 대한 이해 강조 ·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아동의 접근가능성이 있는 정보화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일반 대중으로 하더라도, 아동접근 가능성에 따라 준수의무 부과) ·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범위는 GDPR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 · 개인정보에 개인 식별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 포함
제언 1. 아동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해 아동 접근가능성에 따른 사업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 등의 개인정보 범위 확대 필요				

2.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동의방안 마련 필요

국내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동안 운영해오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외에도,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아동에게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는 아동을 정보주체로서 인정하여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인지역량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윤주희(2014)의 지적처럼 일회성의 동의획득으로 기업이 제시한 기간 동안 아동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동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 할 때에는 성인과 달리 이용 주체와 보호 주체가 아동과 법정대리인으로 분리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 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영역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를 병행하도록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병행고지 방안은 ‘역동적 동의(Dynamic consent)’ 개념과도 연

결될 수 있다. 역동적 동의는 개인정보 관련 의사결정의 주권자로서 정보주체를 강조하여 변화하는 정보주체의 상황에 맞춰 동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Kaye et al., 2015). 역동적 동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상황에 맞춰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회적인 포괄적 동의 방식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주권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병행고지 규정은 이러한 역동적 동의와 유사하게 이용주체인 아동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상황과 보호주체인 법정대리인 모두를 포함하여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가 개인정보 이용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주체와 보호주체가 다름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공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린 연령일수록 그림이나 캐릭터, 비디오와 같이 쉬운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연령일수록 아동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발달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 측면에서 보호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이 개인정보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을 기업의 고지 내용 중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동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지닌 특성과 이용주체와 보호주체가 분리된다는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일회성의 통합적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보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별로 동의 시점을 다변화하고, 아동의 이용시점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보호 공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개인정보 관련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지 내용에 있어서도 만 14세 미만을 동질한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국가별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제도 비교 및 도출 제언

	미국	EU	영국	한국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획득 필수 ·고지 시, 법정대리인 대상 직접고지와 웹사이트 및 온라인 내 고지 병행의무 ·안전항제도에 따른 동의 획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획득 필수 ·고지 시, 표준화된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정확·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을 적용하여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원칙과 아동 특성을 고려한 아동 특화 원칙 제시 ·아동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에게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획득 필수 ·아동에게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함
제언 2. 이용주체인 아동과 분리된 보호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병행고지 및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고지 등 실질적 동의방안 마련 필요				

3.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주체로서의 아동 소비자의 권리 보완

아동 및 보호자에게 개인정보주체로서 부여되는 통제권을 살펴본 결과, EU의 GDPR 전문 제65조에서는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어 충분히 변화 가능한 존재임을 인지하여 추후 성인으로 성장한 뒤에 아동 시기의 개인정보 관련 의사결정의 내용을 지우거나 변경하고 싶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중 정정, 삭제, 처리제한권이 아동에게 더욱 중요하며,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아동이 영향 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이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함양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열람권, 동의철회권, 정정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일정기간(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관될 수 있으며, 아동 시기에 내려진 동의로 인해 성인기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필터링되거나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언어나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열람권, 동의철회권, 정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파일링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서의 아동 및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되는 통제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연구에서 아동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유아시기로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9%로 나타났고, 그 시작 연령도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민석·문혁준, 2015). 이는 아동의 디지털 활동 참여가 쉬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이전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어 UNCRC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가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UN, 1990).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분의 2가 주로 광고수익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heehan, 2004; Neuborn, 2001; Feng & Xie 재인용, 2014).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보주체로서의 보호받을 권리와 정보접근권의 균형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정보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 국가별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의 통제권 비교 및 도출 제언

	미국	EU	영국	한국
아동 소비자 및 보호자 통제권	· 법정대리인의 열람권, 거부 및 삭제권 명시	· 아동을 미래사회구성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 성인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정, 삭제, 처리제한권의 중요성 강조	· 사회구성원의 UNCRC 내 아동 기본 권리를 보호할 책임 강조 ·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시' 강조	· 법정대리인의 열람권, 동의철회권, 정정권 명시
제언 3. 아동 시기의 개인정보 처리결과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필요				

4. 기업 자율규제 실행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국가들 모두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의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제공할 뿐, 이외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다. 현행 국내법 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일회성의 동의로 끝나는 것인데 이는 아동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행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보호조치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윤주희, 2014).

반면, 영국은 연령적합설계규약 전체가 기업이 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며 그 내용 역시 본문에 다룬 바와 같이 세부적이다. 미국 역시 COPPA 시행령에서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FTC에 승인을 받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GDPR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강령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아동보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업의 자율규제를 통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 외에도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매커니즘 마련 등과 같이 자율규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국가별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 자율규제 비교 및 도출 제언

	미국	EU	영국	한국
기업 자율 규제	·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승인에 따른 안전항제도 운영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강령에 아동보호,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식 포함 · 독립적 감독기관이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명시	· 정보안전영향평가(DPIA)를 통해 위험 식별 및 최소화 권장	·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포함
제언 4. 기업 자율규제 실행을 위해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정보제공 및 자율규제 준수 매커니즘 마련 등의 실질적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5.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체계 구축 필요

아동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대한 국가별 정부의 실행체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의 벌금 기준과 수준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해당 기업에게 부과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도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가 규제 조치 유형 중 더 중요한 영역임을 연령적합설계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아동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의 기준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구체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시사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 외에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에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COPPA의 경우에는 이용주체인 아동과 보호주체인 법정대리인이 구분된다는 점을 토대로 기업의 고지의무를 아동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와 법정대리인에게 병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영국은 연령적합설계규약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 외에 아동에 특화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구조이나, 아동이 인지역량이 부족하고 추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현재의 아동과 미래의 성인이 되었을 때의 아동 모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일반법의 구조에 아동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산업특성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관련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영역별 특성을 법제도에 반영한다는 의의는 있지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정 시기 차이로 인한 보호수준의 격차 또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성인과 달리 인지역량이 부족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개정되었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만을 별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룬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업이 실천할 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표 6〉 국가별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실행체계 비교 및 도출 제언

	미국	EU	영국	한국
정부 실행 체계	·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 벌금 납부 조치 및 벌칙 수준 부재	· 아동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위반 시 1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총매출의 2% 벌금 · 정보처리 기본원칙 위반 시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총매출의 4% 벌금	·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가 규제 조치 유형 중 중요한 영역임을 명시 · 위반한 기업에 통지, 경고, 견책, 개선명령 및 벌금 통지(위반 시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총매출의 4% 벌금)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언 5. 아동에 특화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지금까지 아동 개인정보와 관련된 미국, EU, 영국,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아동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소비자의 디지털 활동참여가 활발해지는 만큼 아동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타겟 광고와 같은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아동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기존의 일회적인 동의제도 외에 아동과 분리된 보호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목적별로 병행고지 되도록 하며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고지를 할 때에도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이 추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과 아동기의 개인정보 관련 의사결정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보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정보접근권의 균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끊임없이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업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정보제공 및 자율규제 준수 매커니즘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실행 체계에서 얼마나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상황에 처하거나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별 법제도를 살펴본다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제언을 마련한 것은 국가 구성원들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의를 지닌다.

또, 국가마다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대다수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경과 무관하게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의 국적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아동은 아직 충분한 역량을 지니지 못하였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 지니기 때문이다(UN, 1990). 따라서 추후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에 따른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아동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 맥락에서의 국내 아동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아동이 미래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소비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뒷받침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투고일] 2020. 06. 08

[심사시작일] 2020. 06. 15

[게재확정일] 2020. 08. 31

| 참고문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김민석·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2(1), 77-99.

김지혜 외(2018). 온라인 트래킹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EU, 미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 고찰.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14(2), 15-103.

김효정(2016).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지연·나종연(2009). 소비자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2), 81-102.

연합뉴스(2019.09.05.).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2천억원 벌금…역대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001051071>

윤주희(2014).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와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22(1), 187-2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란·현은자(2014). 디지털 시대의 아동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5(4), 17-40.

이인호(2001).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20, 245-2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8-20**.

정찬모(2014).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최근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17(1), 77-108.

최혜선(2013). 온라인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미국 및 EU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동향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221-261.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ZDNet Korea(2017.02.20). 스마트토이가 아이 개인정보를 노린다?.

<https://www.zdnet.co.kr/view/?no=20170220094424>

Brown, D. H., & Pecora, N.(2014). Online Data Privacy as a Children's Media Right: Toward

- Global Policy Principle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8(2), 201-207.
- Culnan, M. J., & Bies, R. J.(2003). Consumer privacy: Balancing economic and justice consider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9(2), 323-342.
- European Union(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Federal Trade Commission(201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 Federal Trade Commission(2019.02.27.).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2/video-social-networking-app-musically-agrees-settle-ftc>
- Federal Trade Commission(2019.09.04.).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9/google-youtube-will-pay-record-170-million-alleged-violations>
- Feng, Y., & Xie, W.(2014). Teens' concern for privacy when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An analysis of socialization agents and relationships with privacy-protecting behavi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3, 153-162.
- Kaye et al.(2015). Dynamic consent: a patient interface for twenty-first century research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Human Genetics*, 23, 141-146.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20). Age appropriate design: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 - Final version: to be laid in Parliament.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 Musical.ly(2019.02.27). musical.ly's agreement with FTC.
<https://newsroom.tiktok.com/musical-lys-agreement-with-ftc/>
- OECD(2011).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Risks Faced by Children Online and Policies to Protect Them.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179.
- Shin, W., Huh, J., & Faber, R. J.(2012). 'Tweens' online privacy risks and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6(4), 632-649.
- United Nations(199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Youtube(2019.09.04). An update on kids and data protection on YouTube.
https://youtube.googleblog.com/2019/09/an-update-on-kids.html?visit_id=637238520747935268-3636811923&hl=ko&rd=1

| Abstract |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across US, EU, UK and South Korea

Chun Yunsun

Rha Jong-Youn

In 2019,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imposed a \$170 million fine on YouTube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children without their parent's consent. The basis for such act is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 which presumes that children need additional safeguards, distinguishing them from ordinary adults. China, for the same purpose as in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Regulations on Network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to secure and promote the online privacy protection for children.

The needs for strengthening protection for children online privacy arise from two aspects. First,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hildren has changes drastically in the last decade: as digitalization has progressed rapidly, the usage rate of smart devices among children has increased, and children are always being connected making parental protection and guidance more difficult than ever. In addition, the analysis of big data makes personal information a source of value for corporate activities, and as in the case of YouTube, the corporate demand for online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increases the risk of infringement. Second, children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y do not yet have sufficient cognitive competence, so they need to be protected by their parents.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main actors in the future market and as such, they need the opportunity to grow into a competent economic actor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in consumer privacy regulations among US, EU, UK and Korea.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necessary recommendations for

Chun Yunsun | Ph.D student,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ha Jong-Youn | Professor,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vacy protection for children in online environment. The regulation serves as a basis for making judgments when members of society deal with conflict situations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solve problems. Therefore, analyzing the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by country has the significance of confirming what social perceptions of children in the country are and what principles are necessary for protecting privac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protecting children from threat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onsumers with sovereign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at the result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hildhood period remains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continuously impacts in the future.

Key words: *Consumer Privacy, Protection for Children Privacy, Online Personal Information,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S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UK Age Appropriate Design Cod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